

한국 NGO 학회 소식

제3권 제1호 2004년 5월 ●발행인: 김영래 ●편집인: 문형구·손혁재·신재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NGO학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61 204호 (137-070) TEL: (02) 581-3782 FAX: (02) 523-6636 전자메일: koreangos@hanmail.net
URL: www.kangos.or.kr ●창립일: 2000년 11월 17일

권두언

한국 NGO 활동의 반성적 평가



홍 득 표(인하대 교수, 무임소이사)

21세기는 누구나 NGO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예상이 한국에서는 특히 적중했다. NGO는 전환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동에 역동성을 제공하면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져 그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특히 NGO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권력집단화 되어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언론의 4부에 이어 인터넷과 더불어 5부의 위상을 확고하게 차지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NGO활동은 경제정의, 환경, 노동, 여성, 인권, 교육, 반핵, 대북정책, 대외정책, 정당개혁, 정부개혁, 민주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NGO는 정당이 수용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춘 단일쟁점집단(single-issue groups)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정확한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때로는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사회를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NGO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계시켜 주

는 정당의 대체기능(alternative functions)을 수행하면서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그 업적을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제도화 수준이 낮고 오직 권력추구에만 열을 올리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실패가 NGO의 활동영역이나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혀주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일부 NGO활동의 순수성과 역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NGO가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획득하여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반성적 평가를 할 때가 된 것이다.

NGO 활동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마디로 NGO활동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NGO는 시민운동 시민교육 시민동원 기능도 수행하지만 회소가치의 권위적 배분권을 가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정치과정

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수단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대표하는 NGO가 정부여당에 대하여 견제 감시 비판 또는 압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일부 친화적·동반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편에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활동해야 할 NGO가 특정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오면서 그렇지 않은 순수한 다른 많은 NGO나 그들의 활동까지 사시(斜視)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NGO활동이 무조건 국가와 갈등 대립 그리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순수하고 바른 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NGO 중에는 특정 정파와 일부 노선과 활동방향이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NGO가 특정 정파의 외곽후원조직이나 보조자 또는 심지어 흥위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NGO 뒤에 숨은 정치조직보다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정치 세력화하

여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NGO와 그들의 순수한 사회활동을 극히 일부 정치화된 NGO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하거나 폄하할 의도는 전연 없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듯 일부 순수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파에 친화적·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NGO가 전체 NGO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기우(杞憂)에서 지적하는 것 뿐이다.

한국NGO학회는 일반 NGO와 달리 직접적으로 시민운동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다. NGO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순수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양한 NGO가 수행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NGO활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4년도 한국NGO학회 임원 명단

회 장 : 김영래(아주대)

부회장 : 이정희(한국외대) 윤영진(계명대)

총 무 : 김상준(경희대) 김정호(인하대)

연 구 : 박상필(성공회대) 오재일(전남대)
정형욱(한국외대)

편 집 : 장수찬(목원대) 이동수(경희대)
김영미(상명대)

섭 회 : 문형구(고려대) 손혁재(성공회대)
신재일(한국외대)

국 제 : 김혁래(연세대) 노진철(경북대)
양기호(성공회대)

교 육 : 김영수(서강대) 임승빈(명지대)
김의영(경희대) 이명석(성균관대)

감 사 : 김경희(중앙대) 이희태(신라대)

무임소 이사

최한우(한동대) 이홍종(부경대) 김도종(명지대)
윤주명(순천향대) 박재영(경상대) 이원웅(관동대)
김호기(연세대) 조효제(성공회대) 김성국(부산대)
정태석(전북대) 송병주(경남대) 박의경(성균관대)
최대석(동국대) 조대엽(고려대) 이성섭(숭실대)
이수자(성신여대) 이원희(한경대) 허 훈(대진대)
이윤규(경기대) 김왕식(이화여대) 이승종(서울대)
홍득표(인하대) 최진우(한양대) 주성수(한양대)
김의성(연세대)

학회소식

학회 사무실 이전

학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61 204호
(137-070)

(양재역 1번 출구 영동중학교 정문 앞)

전화번호: 02-581-3782 / 02-523-6636(Fax)

동계 특별 학술회의 개최

학회는 작년 12월 23일(화)에 한국문제연구회, 내나라연구소와 공동으로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찰 :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도종 교수(명지대)가 학생운동의 관점에서,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

무처장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본 소식지 8~11page에 요약해서 소개하였다.

제8차 한국NGO포럼 개최

학회는 지난 2월 23일(월)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회의실에서 업코리아와 공동으로 [17대 총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민영 국장(참여연대)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김정훈 박사(한신대)가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의 당선운동”, 박병욱 총장(경실련)이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박효종 교수(시민회의)가 “총선과 시민운동의 역할”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회원소식

(1) [NGO와 한국정치] 출간

김영래 교수(한국NGO학회 회장, 아주대)와 이정희 교수(한국NGO학회 부회장, 한국외대) 외 공저로 [NGO와 한국정치]가 출간 되었다. 지난 수년간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를 통해 발표되었거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글 중 15편의 글을 선정하여 펴낸 것으로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부 NGO의 활성화와 한국정치

제1장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김영래)

제2장 한국의 정치개혁과 시민운동(이정희)

제3장 한국 NGO의 공공재 추구행위와 민주화
(김혁래·김영래)

제4장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박상필)

제5장 총선시민연대활동과 참여민주주의(고상두)

제6장 한국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과 갈등구조
(이정희)

제7장 거버넌스와 NGO(이현출)

제2부 지방화 시대의 NGO

제8장 지방화 시대의 NGO와 민, 관 파트너십(김영래)

제9장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 NGO의 과제
(옥원희)제10장 대전지역 NGO의 성장과 지방자치의 변화
(장수찬)

제3부 글로벌 거버넌스의 NGO

제11장 유엔과 NGO의 파트너십 연구(오경택)

제12장 거버넌스와 NGO의 재정적 자율성(곽진영)

제13장 NGO와 사회자본(박희봉)

제14장 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전략(김영래·이화수·이기호)

제15장 한국 NGO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초국가적 네트워크 활동(김준한·권혁성)

(2) 평생회원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3) 신입회원

신형철 교수(경성대 국민윤리학과)

이윤규 교수(경기대 경상대학)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

허 훈 교수(대진대 행정학과)

이명석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

오무석 강사(경희대 NGO대학원 졸업)

(4) 회원동정

- 김용호(인하대)

한국정당학회장으로 취임. 한편,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5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당.선거제도 개혁의 효과: 17대 총선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 이흥종(한국NGO학회 무임소 이사, 부경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장으로 취임. 한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는 2월 27일 오후 2시 부경대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홍득표(한국NGO학회 무임소 이사, 인하대)

인하대 사범대학장으로 취임.

- 김정호(한국NGO학회 총무이사, 인하대)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부임.

공지 사항

본 소식지의 회원소식란은 회원들의 동정,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연락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GO 관련 도서를 발간하신 경우에도 학회 사무국으로 우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대회 개최예정

한국NGO학회 · 한국비영리학회 공동 주최 2004년 춘계학술대회

한국NGO학회와 한국비영리학회는 5월 20일 목요일 오후 한양대학교 백남학술관에서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UCLA의 Helmut K. Anheier교수를 초청하여 기조강연 기회와 전체회의를 가진 다음 분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Anheier교수의 "Globalization and Civil Society"에 대한 강연이 있는 다음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Anheier교수는 현재 미국 UCLA School of Public Policy and Social Research의 Center for Civil Society 소장이며, UN에 근무했으며, 럿거스대학의 사회학 교수, 존스 홉킨스대학의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시민사회연구소 초대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연구관심분야는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공익재단, NGO, Globalization과 시민사회, 비교사회문화정책, 사회운동과 네트워크 등입니다.

전체회의는 "한국의 시민사회지표와 여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과토의는 "NGO의 평가와 적법성"과 "NGO와 국제사회, 사회자본, 그리고 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국내학자들로 진행되어오던 관행을 탈피해 저명한 학자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관심과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NGO학회 회장 김영래, 한국비영리학회 회장 박태규)

♣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 2004년 5월 20일 목요일 13:30 - 17:40

장소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관

♣ 프로그램

13:30 - 14:30 개회식 및 기조강연

사회 : 이강현 박사(Volunteer 21)
 인사 : 김영래(한국NGO학회장)
 박태규(한국비영리학회장)
 기조연설 : Helmut Anheir (UCLA)
 “Globalization and Civil Society”
 질의 응답

14:40 - 15:50 전체회의 “한국의 시민사회 지표와 여론”

사회 : 주성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1. 한국 시민사회지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발표 : 조영재 (제3섹터연구소)
 토론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2. 자원결사체, 신뢰, 시민사회의 분절
 발표 : 이선미 (제3섹터연구소)
 토론 : 김상준 (경희대 NGO대학원)
3. 시민단체와 게이트 키퍼 언론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발표 : 한동섭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 임종수 (한양대 강사)

휴식 (Coffee Break)

16:10 - 17:40 분과 토론

제1 분과: NGO의 평가와 적법성

사회: 윤영진 (계명대 사회학과)

1. 정부기관의 평가제도와 성과주의
 발표자: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토론자: 김태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2. 시민단체의 사회재판관으로서의 적법성
 발표자: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토론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3. 한국의 시민의식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김선미 (이화여대 사회학과)
 토론자: 이승훈 (한신대 학술원)

제2 분과: NGO와 국제사회, 사회자본, 그리고 기업

사회: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1. 지구시민사회, 국가간 국제체제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 연관과 긴장
 발표자: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공석기 (하버드대 사회학과)
 토론자: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2. 변동사회의 NGO와 사회자본: 한국의 경우
 발표자: 장수찬 (목원대 행정정보학과)
 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개발원, 사회학)
3. 기업의 사회공헌과 시민사회
 발표자: 위평량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토론자: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한국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찰〉 발표논문 소개

한국학생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 도 중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지난 80년대 말 시작된 우리나라 권위주의의 붕괴와 민주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학생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난 김영삼 정부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운동의 소멸을 말하기도 한다. 무엇이라 지칭되던 운동권이 운동방향과 목표의 상실로 인해 내부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외부 사람들이 느끼는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학생운동의 약화는 운동수준이 제도화를 달성, 최고조에 이른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탈제도화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의 영향력 감소는 운동권이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에 적절히 적응 못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권위주의의 붕괴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반대중은 왜 학생운동에 냉소적인가? 그 이유는 80년대 말, 다시 말하면 6공 이후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이 정통성의 정치에서 효율성의 정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통성을 둘러싼 반독재민주화 투쟁과정에서는 학생운동권이 국민을 대신하여 '대리전'을 치르는 '대항세력'으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오랜 투쟁 결과 권위주의가 퇴조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일반대중이 바라는 것은 과거와 같은 '대항세력'이 아닌 자율화의 추세 속에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줄 '대안세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감지 못한 학생운동권은 타성에

젓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투쟁적 운동을 계속 전개함으로써 여론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고 학생대중을 실망시킨 것이다. 학생대중의 이탈은 학생운동의 강점인 동원력의 상실로 이어졌고 결국 운동권의 왜소함만 드러내고 말았다.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학생운동의 존재여부를 이야기 한다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동방식과 이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의 주체는 젊은 학생들이고 이는 교육적 차원의 분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할 '미래의 엘리트'이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때는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운동방향을 바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이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직 제도권밖에 머물러 있는 학생운동권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 현재의 학생운동권을 소위 반합 상태라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수준을 말하며 확대 해석하면 불법이다. 이를 합법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 공적 제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제도권의 포용력 증대이다. 과거 민주화 투쟁에서 비제도권에 속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제도권 안으로 수용됐다. 운동권 스스로는 비제도권 세력으로 남아 있을 경우 학생운동이 소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정치권은 영역을 확장, 이들을 받아들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도권 진입은 학생운동권이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폭력적 수단의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고 제도권밖에 남으려는 집단은 공권력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정책이 실행가능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운동권은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이더 이상 '정통성의 정치'가 아님을 인식하고 '효율성의 정치'에서 학생집단이 담당해야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학생집단이 과거와 같이 항시적으로 정치투쟁의 주도세력일 수는 없다. '부도덕한 정권 對 양심적 운동권'이라는 구도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효율성의 정치란 대안의 제시를 전제로 한 정치참여를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 투쟁이 아닌 긍정적 사고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과거 운동권을 지배해왔던 '부정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정의 논리'를 불식시키려면 제도권 스스로가 권위를 회복하여야 한다. 현재 개혁의 추진으로 제도권의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권위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비합리적인 후보공천과정, 자질부족의 정치인, 사회변화를 못따르는 입법활동 등은 젊은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로부터도 정치권이 기능적 권위를 인정 못받는 결과를 빚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이 절차적, 기능적 합리성을 회복할 때 정당한 권위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며 '부정의 논리'로 무장한 비제도권의 도전을

배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이란 학원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학내쟁점과 학외쟁점의 무차별화 현상이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내쟁점이 학원 자체능력으로 해결 지을 성질의 것이 별로 없다. 등록금 인상과 같은 순수 학내문제가 초기 원만한 타결에 실패하였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원사태의 정치화를 의미하며 곧 학간연대 투쟁 내지 학외투쟁으로 이어진다. 학원사태의 악순환 고리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48년 일본의 학생들이 전학련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대학등록금의 일률적인 300% 인상조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간연대투쟁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발생하자 등록금 쟁점은 정치화하고 말았다. 1968년 드골정권을 퇴진시킨 파리학생봉기도 대의 학제개편이라는 순수 교육적인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어 벌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의 자율성이 완전보장되면 학내쟁점의 학외쟁점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하기 위한 투쟁이란 자율성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도 자율성 확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도 파행적, 파괴적 양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의 정상화 없이 학생운동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시민운동의 성장, 그리고 변화

하 승 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운동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만큼이나 역동적이고 급속하였다. 그러나 그 경이로운 성장만큼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었다. 더구나 노무현정권의 등장을 전후로 시민운동은 그간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시민운동 내외로부터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근본적 성찰을 요구받는 등 90년대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과거처럼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이라 할만큼 지지를 받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다른 상황에 처한 시민운동의 최근 모습을 돌아보고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서 보여주었던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대선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시민단체가 지난 10년간 지켜 온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은 이미 노사모처럼 '변화'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지지를 확고히 한 대선 당시의 역동적 흐름과 함께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를 그간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기치로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공분을 대리하던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사모가 상징하듯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대리인을 매개로 의사를 표현하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또 하나의 변화는 시민운동의 이념적 분화를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들어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처럼 스스로 중도 보수라 규정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시민운동에서는 현실적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신 2000년대의 시민운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체적 사회적 공공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경실련이 입장 차이를 노정 한 것처럼당분간 구체적인 정책을 매개로 하여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흐름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3) 90년대에는 각종 이슈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성장하였다. 여성, 인권, 환경, 장애인, 정보화, 교통, 도시 등 계급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도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얻어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이 보다 대중화되고 그 외연도 확장되었다. 인터넷의 대중적 사용으로 인한 각종 자발적 조직들의 발전과 각종 구체적 분야별 조직들이 생성되어 발전해갔다.

4) 세계화나 정보화가 가져 온 우리 사회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 운동의 조건이 되었다. IMF 위기는 결국 투기적 이윤만을 노리는 자본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반세계화와 평화를 위한 운동은 시민운동의 영역을 보다 넓게 하였다.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보다 가속화하고 더욱 심층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보화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 낼 기제가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해 내는 경제적 지위와 맞물린 정보격차, 권력의 독점을 생산해 내는 정보의 집중/정보의 공개와 공적 자원화, 정보접근권(정보의 이용과 사용방법) 등은 새로운 영역의 시민운동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5) 이미 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 정치적 중립성과 그로 인한 노무현정권과 가깝지 않느냐는 정치적 의구심을 벗어나는 것은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이 지난 10여년간 시민운동의 중심적 과제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러하겠지만 보다 본격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의 과제들이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오히려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

기에 들어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시민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미약하다. 생태적 가치를 내세우는 환경운동은 아직 부문운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양성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온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인권적 감수성을 주장하면서 시혜가 아닌 권리로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정보사회가 가져다 줄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와 정치권력과 기업의 감시와 통제문제에 대해서도 이제야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제도도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빈곤과 실업의 문제, 그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 등 그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은 기존의 가치나 패러다임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같은 과제를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분명한 사회적 의제로, 정치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한편으로는 노무현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다투고 협력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시민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스스로가 과거의 프리즘에 자신의 시각을 가두지 말고 이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소개

●설립목적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는 비영리(NPO), 비정부(NGO)단체의 활동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선진 시민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1988년 1월에 설립되었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는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델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우리 사회현실에 다시 적용하는 '사회실험실'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활 동

1. 학술

-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
- 시민사회연구회 개최
 - 1회/1개월 시민사회와 관련한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학계 및 시민운동 전문가들의 참여, 월 평균 약 20여명 참석

2. 연구

- 한국 시민사회지표 조사
 - 시민사회전문 연구 단체 CIVICUS로부터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연구 수행
 - 한국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 개발 및 연구 수행
- NGO 관련 강의 개설
 - 세계문화변동과 사회문화
 - 시민사회와 NGO
 - 신사회운동과 NGO
 - 정책과정과 NGO
 - 지구환경협력의 이해
 - 한국과 세계의 NGO
 - NGO와 정치

3. 시민사회도서관 운영

- 시민사회 및 NGO 관련 연구를 위한전문 도서관 운영
- 2004년 2월 현재 영서 700권, 국서 300권 총 1000여권 보유
- 외부 연구자들에게 대출 및 반납

4. 출판

- 학술저널 발간 - 시민사회와 NGO

- 반년간 학술저널
- 창간호 2003년 봄여름호, 2호 2003년 가을겨울호 발간
- NGO 연감 발간 - NGO Report
 - 연감
 - NGO Report 2001 이후 매년 1회 발간
- 시민참여시리즈(5권예정)
- 시민사회시리즈(04, 2월 현재 10권 발간)
- 기타
 - 기업시민정신과 NGO(2003년)
 - 한국시민사회와 지식인(2002년)
 -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2000년)
 -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1999년)
 - 국정홍보처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1998-2003년 평가보고서
 - 서울시정 참여사업 2000년 평가보고서(2000년)

●연구진 소개

연구책임자

주성수

북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사회정책 전공)를 취득, 89년부터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시민사회와 제3섹터>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NGO 논쟁> <새천년 한국시민사회의 비전>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 <한국 NGO 리포트> 등 다수가 있다.

전임연구교수

남상민 (환경정책학박사)
오현철 (정치학박사)
이남석 (정치학박사)
이선미 (사회학박사)
정상호 (정치학박사)
조영재 (정치학박사)

객원연구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박병진 (한양대 교무처 입학관리실 전문위원)
김영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회원가입 신청서

한국NGO학회는 한국 NGO에 관한 학제간 연구 및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학회와 NGO간의 대화 및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며, 해외의 다양한 NGO 학회들과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이러한 한국NGO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하여 한국NGO학회는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의 종류 및 회비 (희망하시는 사항을 □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회원 종류	1년 회비	2년 회비	3년 회비	평생회비
☐ 정회원	☐ 30,000원	☐ 50,000원	☐ 70,000원	☐ 300,000원
☐ 준회원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특별회원(개인)	☐ 30,000원	☐ 50,000원	☐ 70,000원	☐ 300,000원
☐ 특별회원(단체)	☐ 100,000원	☐ 180,000원	☐ 270,000원	

성 명(단체명)		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직		장				직위					
주소	자택				전화/팩스						
	직장				전화/팩스						
E-mail						휴대폰					

2004년 월 일

가입신청인 서명:

가입신청서 송부 및 회비송금:

한국NGO학회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61 204호

전화: (02)581-3782 / 팩스: (02)02-523-6636

E-mail: koreangos@hanmail.net

회비송금: 국민은행 086-01-0349-364 김영래(한국NGO학회)

우체국 103622-01-005001 한국엔지오횰회

한국NGO학회 회원 카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주 소	(자택)	(우편번호)	
	(직장)	(우편번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직장)	(전자우편)	
	(팩스)		
전 공(구체적으로)			
최종학위명 및 수여대학			
학위논문 제목			
대표적 연구실적 (5편 이내)			
주요 관심분야			
소속 학회			

※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61 204호 (137-070) 한국NGO학회 사무국

전화: (02)581-3782 팩스: (02)523-6636 전자우편: koreangos@hanmail.net

※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사진1매를 우편 또는 E-mail로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인명록은 회원들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